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의 중요성과 방향

금 재 호\*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예상보다는 완화되었다. 특히 2010년 들어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측면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자리 문제해결은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2008~09년 2년 동안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922천 명 증가하였지만 취업자는 73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2007년의 고용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469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추가로 필요하였다는 뜻이다. 과거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일자리 부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 잠재력의 확충,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의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규모는 53,75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24개의 부처가 모두 198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월 80만 원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할 때, 이러한 예산규모는 559,927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실제로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고용창출 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지켰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1997년의 외환위기 이래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 큰 폭의 도약을 하였고 정책 효율성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사례, 사업간·시행기관간의 협력 및 연계가 부족한 사례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요구된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노동시장 취약계층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keum@kli.re.kr).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범주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계층에 대한 특화된 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각 부처 별로 시행되어 정책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일자리지원사업의 범주, 목적, 정책대상, 성과평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과 이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일자리 위주의 사업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이러한 사업은 지양하고 「취업능력 제고 → 취업유인 정책수단 제공 → 안정적인 일자리 → 빈곤탈출」의 연계고리가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너무 많은 수의 대책은 비효율성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모든 사업을 심층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과 중복 지원의 가능성, 그리고 전달체계의 부실 등 세 가지가 대표적 비효율성으로 지적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청년, 고령자,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3~4개의 핵심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 다른 OECD국가와 마찬가지로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및 창업 지원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 일자리 창출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접 일자리 창출과 고용 인센티브에 대한 투자 비중은 낮추도록 한다. 고용지원금·장려금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 실적과 효과가 기대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고용 인센티브 사업들을 정비하며, 새로 고용인센티브 사업을 도입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부작용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기간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분류하고 단기, 중기, 장기의 각각에 대해 별도의 정책패키지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 처방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조치를 그리고 중기적 대응은 2010년대 중반까지의 과도기적 위기관리를 의미한다. 또한 장기적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기능의 정상화·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다. 하나의 예로 청년인턴제는 단기적 처방, 한시적 청년의무고용제는 중기적 위기관리 대책, 그리고 대학정원의 조정은 장기적 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기적 고용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도록 한다. 그리고 과도기의 위기관리를 위한 중기대책은 ‘정책 일몰제’를 원칙으로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KL**